

“전남 재정자립도 꼴찌인데 지방분권 되겠나”

자립도 16.3%... 신안·강진·구례는 10% 미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2명 전국 두번째 작아

전남도 국감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지방행정체계 개편 등 ‘지방분권’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꼴찌인 전남이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전남도는 재정자립도 16.3%로 전국 최하위이고, 전국 최하위 30위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은 11개 시군이 포함되는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며 “재정 여건이 취약한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가능 하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안(8.6%)·강진(9.3%)·구례(9.9%)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전남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인구 수가 평균 92명으로, 강원(90명)에 이어 두번째로 작다. 특히 재정자립도 하위 30곳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 15곳에서 전남 기초단체는 신안·강진·구례·함평·진도·곡성군 등 6곳이나 포함됐다.

이는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주민 대비 공무원 비율은 타 시도와 비교해 높다는 의미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전남의 여력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없는지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은 통합 등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행안부 조직정책관을 지난 행정전문가로서 답변해 달라”고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에게 주

문했다. 백 의원은 “지방정부가 조직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 재정을 넘겨주는 걸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실질적인 자치권한과 함께 재정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여수(36.1%)와 광양(35.5%)을 제외하면 전남 2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이라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한다고 해도 산업기반이 약한 전남에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전남도의 정책적 대안은 뭔가”고 물었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정부가 공동세를 마련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배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국가 혁신 차원의 지방체제 개편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자치경찰제·교육자치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등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17개 시도 공무원 및 인구 현황

시도	공무원수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강원	1만7189	154만7453	90
전남	2만604	189만9088	92
경북	2만5413	269만2859	105
전북	1만6535	185만8927	112
제주	5367	64만7547	120
충북	1만3262	159만2573	120
충남	1만7081	210만5950	123
경남	2만3060	337만2586	146
세종	1514	25만9157	171
부산	1만7780	348만9212	196
광주	7314	146만6741	200
서울	4만9317	991만9016	201
대구	1만2126	248만2476	204
대전	7322	150만9589	206
인천	1만3721	294만6270	214
울산	5921	142만7117	241
경기	4만9875	1277만5175	256

(출처: 박성중 국회의원실)

청렴도 최하위 전남도,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전남도가 소속 공무원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전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 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46건이었다.

유주 운전이 36건(위협운전치사상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3건, 뇌물수수 및 금품횡령 등 부패범죄 3건, 기타 4건이었다. 이 가운데 41건(89.1%)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했고,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특히 술자리에

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3건의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도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

헬충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경징계를 받았다.

소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해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민원인 평가 항목인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전남 공직사회 실태에 대한 불신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라며 “빠를 꺾는 조직쇄신이 없다면 추락한 도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항 물동량 지속 감소 지난해 230만TEU

한진사태 이후 35% 급감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의 투-포트(Two-Port)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광양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230만TEU도 처리하지 못한다. 올해도 233만TEU 목표량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양항 물동량 감소 이유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동맹이 재편되면서 환적 화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양항

을 기항하는 해운동맹 처리 환적 화물이 전체 환적화물의 85%를 차지했으나 한진사태 이후 환적 화물이 동기간 대비 35%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가 환적물량 감소 대책으로 선사지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지만 부산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는 게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부산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146억원을 지원했지만 광양항은 53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지원도 부산항은 매년 30억원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광양항은 1억3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환적물량 불균형이 심각해져 광양항 44만2980TEU와 비교해 부산항은 983만5826TEU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인장기요양 인정률 광주·전남 최하위

서비스 제공기관도 부족

지역별 격차 최대 14.6%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14.6%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인정을 받더라도 광주시 등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51만9000명(61.2%)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7.2%)과 경기(66.1%), 인천(66.6%)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61.2%)보다 높은 반면, 광주(53.6%)

와 전남(55.7%), 전북(52.6%) 등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대상자인 8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3.2%), 인천(3.3%) 등 수도권보다 전남(7.3%)이나 전북(6.3%) 등 지방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더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급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14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경우 4곳의 단기보호시설이 있지만, 자신의 주거지역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많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86.9%에 달했다. 10명 중 9명 가까이 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진핑 사상’ 당헌 개정안 찬성 2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앞줄 가운데)과 당대회 대표들이 ‘시진핑 사상’이 포함된 당헌(黨章·당헌) 개정안에 대해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국고보조사업 부담금 800억 시·군에 떠넘겨 ‘갑질행정’

정부의 국고 보조사업 중 전남도가 부담해야 할 법정외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갑질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고 보조사업 기준 부담금 미준수에 따른 시·군 전

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3년간 800억원의 막대한 법정외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일선 시·군에 떠넘긴 부담금은 ▲2014년 270억 ▲2015년 257억 ▲2016년 273억 등이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

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광역단체와 시·군 등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기준 부담금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남도의 부담금을 매년 수백억원씩 떠넘겨 왔다. 특히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

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에 전남도는 최근 2년간 전남도의 예산을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전액 시·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54억원, 2016년에는 48억원 등 102억원을 시·군에 전가했다.

전남도는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구회 경지정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자연환경 보존시설 지원, 임도건설 등 매년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도 재원 부족의 이유로 시·군에 예산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원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 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병행
 보라안과 병원 문귀형 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 원장 | 수완지구 관절척추병원
 인 하루 치과 이광훈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 21 병원 양태영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 분 비 내 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필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태영 21 병원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